

정책분석과 동향

기후위기와 건강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

|채수미·김혜윤|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주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황남희·김은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주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¹⁾

Japan's Policy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Relocation Support, Hometown Tax, and Policy Lessons for Korea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은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원

이 글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의 인구감소 현황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육아지원 정책과 지방창생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의 이주 지원과 고향납부세, 돗토리현의 지역 기업과 도시 구직자 연계 사례를 논의한다. 일본의 다양한 정책 사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한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은 법제도 정비, 지자체 주도의 실질적 대응, 기업 참여 유도에서 정책 수립 및 개선에 참고할 만하다. 연구진은 일본 정책 사례의 한국 적용 방안으로 1)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 2)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3) 지자체 주도의 통합적 전략과 지자체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한국의 총인구는 1970년 약 3224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 5183만 6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2023년 총인

구는 5171만 3000명으로 2022년 총인구 5167만 3000명 대비 약 4만 명 증가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장인수, 임준경, 2023)²⁾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한국은 202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1) 이 글은 황남희, 김은지, 이성환, 라민경. (2024).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이다.

2) 인구성장률은 1970년 2.18%에서 2021년 -0.13%, 2022년 -0.19%로 음(-)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0.08%로 양(+)의 성장률을 보였다.

[표 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인구성장률	구분	총인구	인구성장률
1970년	32,240,827	2.18	2020년	51,836,239	0.14
1980년	38,123,775	1.56	2021년	51,769,539	-0.13
1990년	42,869,283	0.99	2022년	51,672,569	-0.19
2000년	47,008,111	0.84	2023년	51,712,619	0.08
2010년	49,554,112	0.50			

출처: “2024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장인수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8, <표 6-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을 재구성.

시작하여 인구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인구변동 특성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자연 증가는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자연 감소)로 나타나지만, 국내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 증가는 수도권에서 양(사회 증가), 비수도권에서 음(사회 감소)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사회 증감과 자연 증감-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김정숙, 한승혜, 2023; 김현호 외, 2021).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율 저하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 감소 대응 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은 비수도권의 인구이동을 통해 지방소멸을 심화시키는 등 국가의 존망과도 관련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치열한 경쟁과 주거비용 급등, 인프라 부족 등은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포기시켜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며, 비수도권의 침체로 인한 불균형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활력 저하와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는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하며, 부정적 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 문제를 먼저 경험한 해외 사례, 특히 한국과 유교 문화의 공통성과 정부 정책의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사례를 파악한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정책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우하린 외, 2024; 박성현 외, 2024).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비해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들에서는 국외 정책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거나 보다 큰 정책 속에서 해외 사례의 일환으로 인구감소 사례를 다루었다.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대응해 온 일본의 정책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의 방향성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은 출산을 제고, 이민과 같은 국외로부터의 인구 유입, 국내 다른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인구소멸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주 지원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단순한 정책 소개 수준을 넘어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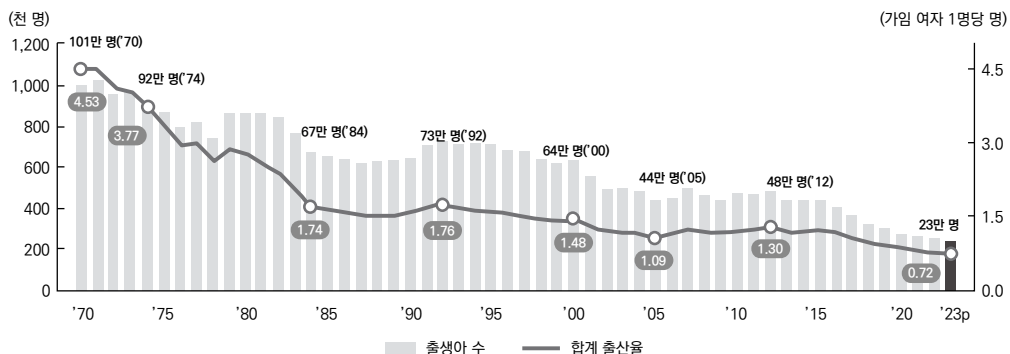
2 한국의 인구감소 현황과 대응 정책

가. 인구감소 현황

한국의 인구감소는 출산력(fertility), 사망력

(mortality), 이동력(migration) 전반에서 유례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우해봉 외, 2021). 특히 출산과 관련한 통계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출산율 1.0명이 붕괴된 이후(0.98명)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도 대비 0.06명 감소하였다(통계청, 2024. 2. 28.). 2024년에는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전혜원, 2024. 1. 10.).³⁾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합계출산율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수치가 낮아져 여성이 평생 가임 기간 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가 인구 대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점차 하락하고 있다(신윤정, 2020). 1970년 101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23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평

[그림 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3년)



주: 2023년은 잠정치임.

출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2024. 2. 28.,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3p, p. 3.

3) 그러나 2024년 실제 합계출산율은 2023년보다 0.03명 증가한 0.75명이었다(통계청, 2025. 2. 26.)

균 출산 연령 상승과 관련 있는데, 평균 출산 연령은 2013년 31.8세에서 2019년 33세, 2023년 33.6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2024. 2. 28.).

지역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모두 최근 10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낮아졌다. 2023년 기준 세종과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지만 1명에 미치지 못하는 0.97명이며, 2013년과 비교하여 약 0.5명 감소하였다(통계청, 2024b).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2013년 0.97명에서 2023년 0.55명으로 변화하였다(통계청, 2024b). 한국은 전반적으로 출산율 하락, 출산 시기 지연, 지역 간 격차 등 다층적인 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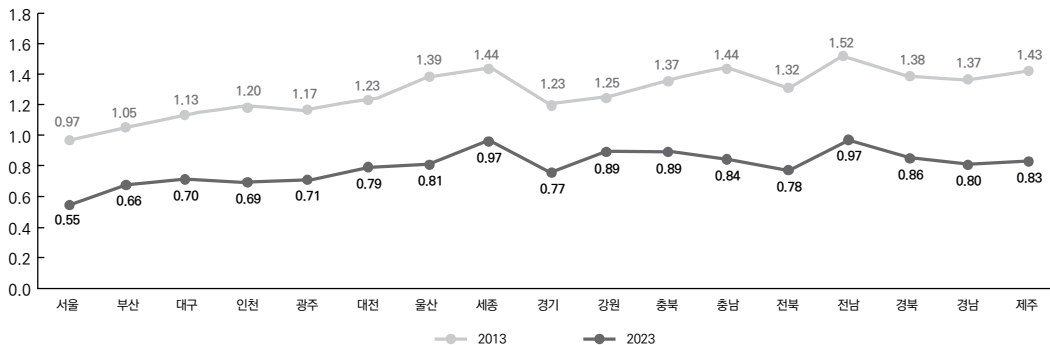
사망 통계는 출산보다 안정적이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에 진입하였으며, 2023년 사망자

수는 35만 2700명으로 전년보다 5.4%포인트 감소하였다(통계청, 2024. 2. 28.). 2020~2022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사망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측면도 있으나, 고령화의 진전으로 고령인구의 절대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의 공식 종료 이후 사망자 수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5).

한국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1970년 약 405만 명이었던 이동자 수가 2023년 약 61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이동 사유의 약 81%는 주택(34.0%), 가족(24.1%), 직업(22.8%)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지역이 시도 내인지 시도 간인지에 따라 사유는 차이를 보이는데, 시도 내 이동의 경우 주택이 42.6%로 가장 많았고, 시도 간 이동은 직업이

[그림 2] 17개 시도의 합계출산율 변화: 2013년, 2023년

(단위: 천 명, 가임 여자 1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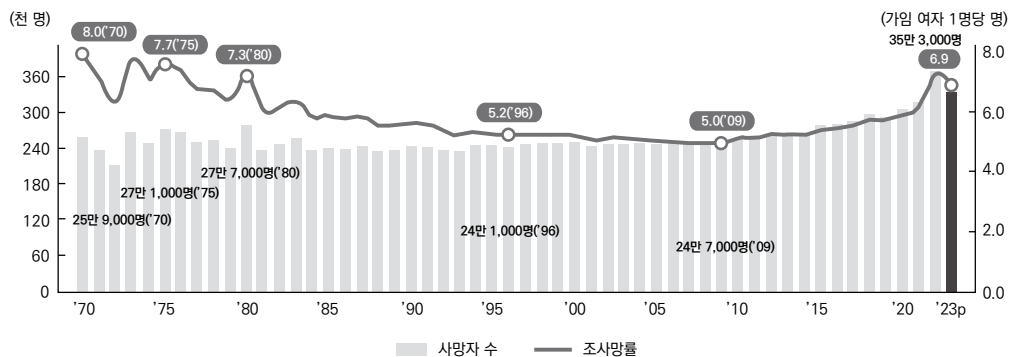


출처: "인구동향조사(합계출산율(시도/시/군/구))" [데이터 세트], 통계청, 2024b.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conn_path=13

35.1%로 가장 많았다(통계청, 2024. 1. 30.). 연령별로 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193만 8000명으로 전체 이동자 수(338만 3000명)의 57.2%를 차지했는데, 주로 직업과 관련한 이유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대는 직업을 사유로 한 이동이 44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직업이 25만 9000명으로 20대보

다 조금 적지만, 가족(25만 7000명)과 주택(18만 4000명) 사유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2024). 2023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이동자의 전체 수는 36만 8000명이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수는 41만 5000명이다(통계청, 2024a). 17개 시도의 순이동률 변화를 비교해 보면 전입보다 전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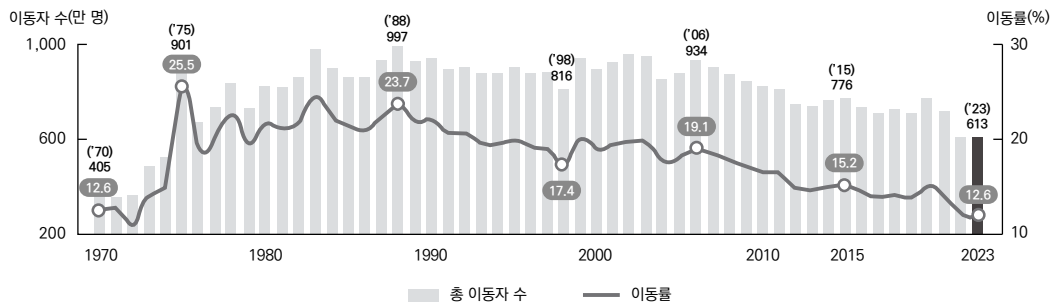
[그림 3]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 추이(1970~2023년)



주: 2023년은 잠정치임.

출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2024. 2. 28, [그림 12]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 1970~2023p, p. 13.

[그림 4] 이동자 수와 이동률 추이(1970~2023년)



출처: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통계청, 2024. 1. 30, [그림 1] 이동자 수 및 이동률 추이, 1970~2023, p. 3.

많은 인구감소지역은 2013년 7개 시도(41.2%)였으나, 2023년에는 12개 시도(70.6%)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4b).

나. 인구감소 대응 정책

한국의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0년대에는 관련 법제도 기반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20년 12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법은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기반을 확장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현호 외, 2021). 2023년 7월 국가균형발전법이 폐지되고, 2023년 6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지방분권(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하여 2023년부터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새롭게 수립·시행되고 있다. 2022년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데, 5개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최근 인구감소 대응 주요 정책으로는 인구감소 지역 지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와 지역활

력타운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농촌 지역 빈집 재생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있다. 2021년 89곳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근거하에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의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12. 8.). 또한 정부는 생활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의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장하며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곳이라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는 사람을 의미한다(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의 2).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하고자 2023년부터 '고향올라(GO鄉ALL來) 사업'을 공모로 선정하였다(행정안전부, 2023; 행정안전부, 2024. 7. 9.). 행정안전부는 다부처 협력으로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방 이주 및 정착에 대한 수요가 있는 수도권 청년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 맞춤형 주거 거점"을 제공한다(행정안전부, 2023. 6. 2.; 행정안전부, 2024. 5. 10.).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4) 그간 지역의 인구정책은 정주 인구(주민등록인구)를 중심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집중한 결과 지역 간 불필요한 인구 경쟁을 야기하며 정주 인구의 개념에 집착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제로섬(zero-sum) 게임이 지속된다는 비판(임태경, 2024)이 있었다. 대표적인 지자체 사업으로 전입 지원금을 들 수 있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 주거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전입하는 경우 현금 또는 지역화폐·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주민등록을 옮기고 일정 기간(보통 6개월~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한다(정부24. n.d.).

‘고향사랑기부제’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자체를 선택하여 기부하면 그 금액이 해당 지방의 재정 수입원이 되고, 기부자는 그 답례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받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4년 10월 누적 기준 325억 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었다(행정안전부, 2024. 2. 1.; 행정안전부, 2024. 10. 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3월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에 따라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여 4일은 도시에서 지내고 3일은 농촌에서 지내며 도시와 농촌에서의 삶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4도 3촌’과 농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빈집,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3대 은행’을 발표했다(농림축산식품부, 2024. 3. 28.). 특히 빈집은행은 매매 가능한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여 개인 간 거래를 촉진하는 것으로,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 빈집을 마을 호텔 또는 워크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4. 7. 2.).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

[표 2]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

구분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소멸위기지역 창업	창업성장 플러스	
사업 내용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일자리와 임금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서울 외 지역에서 창업 초기(지역 내 창업 7년 이내) 청년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 마련	지역사회 공헌 등의 분야 청년 직무 경력 쌓기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 유도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 2년 동안 연 2,400만 원 내외 임금 - 3년차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취·창업(3개월 내)하여 정착할 경우 연 1,000만 원이내의 인센티브 - 직무역량 교육	- 1년차 창업준비 비용 1500만 원 - 2년차 창업 성공 시 시제품 제작·홍보비 등 1500만 원 - 3년차 청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 동안 인건비 2400만 원 추가 지원	- 1년차 시제품 제작·홍보비·공간임차료 등 1인당 연 1500만 원 - 2년차 청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청년 인건비 2400만 원 추가 지원	- 1년 동안 연 2250만 원 내외 임금 - 직무교육

출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n.d..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를 바탕으로 재구성.

하면 지원한다.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 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비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 유형별로 지원 수준이 다르다(행정안전부, n.d.).

3 일본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이주 지원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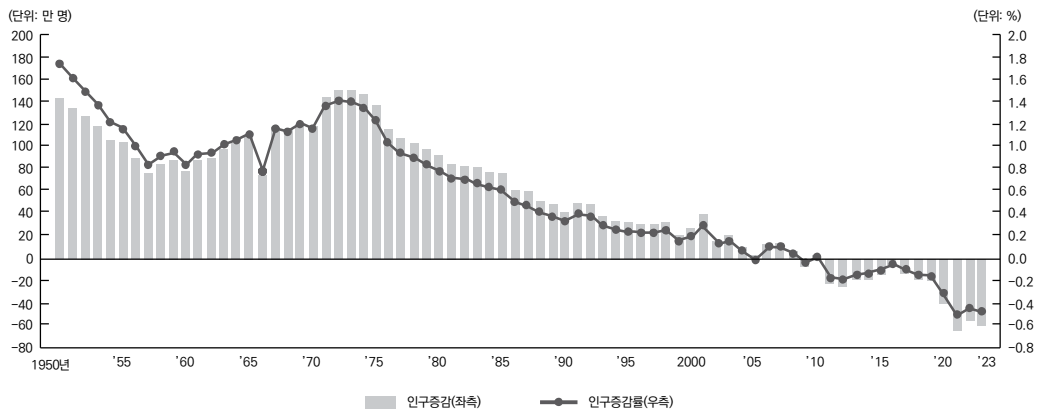
가. 일본의 인구감소 현황

일본은 인구조사를 시작한 1955년에 약 89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967년 1억 명을 돌파하였다. 이후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되며 2008년 정점을 찍은 뒤 2009년부터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총인구는 2024년 기준 약 1억 2376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59만 명이 감소하였다(総務省,

2024a). 일본의 총인구는 장기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31년 1억 2000만 명을 밑도는 9965만 명, 2035년 87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内閣府, 2024).

이러한 인구감소의 원인과 배경은 우선 저출생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치는 1966년 1.58명이었다. 1990년에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1.57 쇼크’로 인해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었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198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결혼 연령의 상승, 비혼화 등이 꼽힌다. 일본에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출생률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5] 일본의 인구 증감 규모와 비율



출처: “人口推計 2023年(令和5年) 10月 1日 現在,” 総務省, 2024a. <https://www.stat.go.jp/data/jinsui/2023np/pdf/2023np.pdf>,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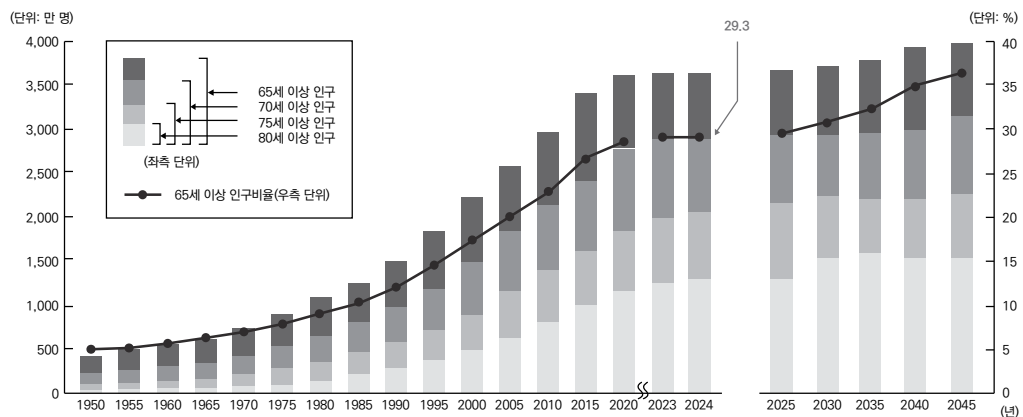
(내각부, n.d.).

일본의 고령화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⁵⁾ 2024년 기준 29.3%이다(総務省, 2024b).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623만 명(2023년 10월 기준)이며, 연령집단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65~74세 전기고령인구(1615만 명, 13.0%)보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2008만 명, 16.1%) 규모가 더 크다. 일본의 베이비붐세대인 단카이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3653만 명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43년 395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7%가 될 전망이다. 고

령인구의 집단별로 정점 시기가 달라서 65~74세는 2016년 1767만 명으로 이미 정점을 찍은 후 증감을 반복하다 2041년 1736만 명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75세 이상 인구는 증감을 반복하다 2052년에 정점 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内閣府, 2024).

현재 일본의 인구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로 주로 발생하지만, 향후 일본의 인구감소는 단카이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이를 다사사회(多死社会)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는 저출생 문제보다 높은 사망률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이른바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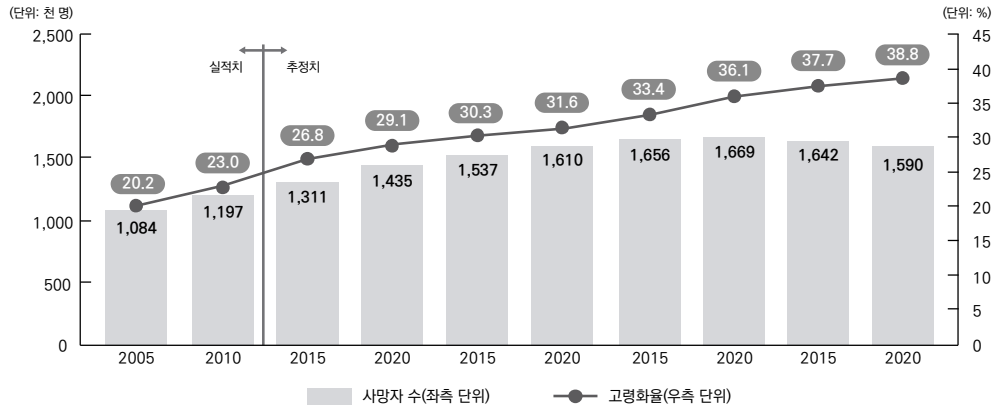
[그림 6]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규모와 구성비(1950~2045년)



출처: “統計からみた我が国の高齢者,” 総務省, 2024b. <https://www.stat.go.jp/data/topics/pdf/topics142.pdf>, p. 3.

5) 2위 이탈리아 24.5%, 3위 핀란드 23.6%, 4위 마르티니크 23.5%, 5위 푸에르토리코 23.4%, 6위 포르투갈 23.3%, 7위 그리스 23.1%, 8위 크로아티아 22.7%, 9위 독일 22.7%, 10위 불가리아 22.3% 순이다(総務省, 2024b).

[그림 7] 사망자 수와 고령화율(2005~2050년)



주: 2010년까지의 사망자 수는 인구동태통계(일본), 2010년까지의 고령화율은 인구조사, 2015년 이후의 사망자 수와 고령화율은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헤세이 24년 1월 추계)의 출생 중위, 사망 중위 가정에 근거하여 추계함.

출처: “多死社会 一人ひとりが「死に方」を考え、それを実現する仕組みが必要,” 日本総研, 2013. <https://www.jri.co.jp/page.jsp?id=25862>

출생 사회에서 다사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日本総研, 2013).

일본에서는 단카이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2010년 약 120만 명에서 2025년까지 5년마다 약 1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제로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후생노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도 연간 약 150만 명의 사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厚生労働省, 2022).⁶⁾

나. 일본 중앙정부의 국내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방향성

일본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인구감소의 위기

감이 확산되면서 이후 다양한 인구감소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법률 제정과 지방창생전략, 그리고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 등 대표적인 정책들을 발표하며 각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현재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와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출생률 제고를 목표로 한 정책을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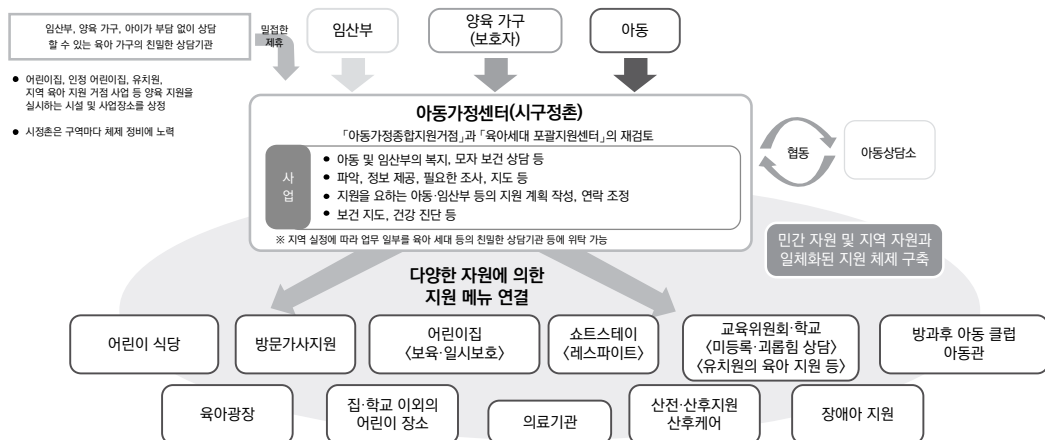
6) <https://www.mhlw.go.jp/shingi/2006/09/dl/s0927-8e.pdf>

선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출생률 회복이 전망치보다 5년씩 지연될 경우 장래인구가 약 3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률을 소폭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동시에 다양한 장기적 대책을 설계·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厚生労働省, 2015).⁷⁾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정책 추진과 실현을 위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정책적 대응과 함께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해 왔다. 일본의 인구감소와 관련된 법안들을 개괄적으로 육아지원 관련법(육아 관련 3법)과 지역창생(재생) 관련법으

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지역과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2003년에 제정된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은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과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육아 환경 정비나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과 함께 성립된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은 지방공공단체와 기업이 차세대 육성지원을 위해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2010년에 제정된 어린이·청년육성지원추진법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자립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에 제정된 어린이·육아지원법에서는 지역 설정에 맞는 포괄적인 육아지원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인구감소의 근본적

[그림 8] 아동가정청의 상담 지원 기능 일원화 예시



출처: “こども家庭センターについて, こども家庭庁.”, こども家庭庁, 2023. <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001127396.pdf>, p. 4.

7) <https://www.mhlw.go.jp/wp/hakusyo/kousei/15/dl/1-02.pdf>. 2015년판 후생노동백서.

인 접근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거버넌스를 개편하였다. 일본의 인구감소나 육아지원 등의 정책 대응은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후생노동성 소관이었으나, 아동과 가족 지원 체계를 분리하여 일원화하는 작업을 통해 아동가정청을 컨트롤타워로 설립하였다(아동가정청, n.d.). 또한 일본은 육아지원과 인구감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아동가정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 관련 사회적 과제와 육아 세대를 위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2023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수가 80만 명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아동미래전략방침(子ども未来戦略方針)”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2025년 2월부터 지급 대상 연령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중학생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고등학교(18세)까지로 확대하고, 다자녀 세대(셋째 자녀 이상 해당)에는 아동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 일과 육아의 양립으로는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 고용과 관련된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이용 가능 연령이나 조건을 없애고, 기존에 8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의 급여를 100%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비의 경우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는 정상 분만에 한해 공적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아동 의료비를 조성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감

액을 없애는 등 전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인 지방창생전략은 크게 ‘적극적 전략’과 ‘조정 전략’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적극적 전략은 인구감소 속도를 가능한 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정 전략은 인구감소에 대응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1)도쿄 일극 집중의 해결, 2)젊은 세대의 취업, 결혼, 육아에 대한 희망 실현, 3)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과제의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지방창생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마을 사람,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역을 재생하는 일종의 지역창생 종합 전략이다(内閣府, 2022).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지자체는 주거, 일자리, 경제, 육아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일본 지방창생전략의 또 다른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후루사토 납세, ふるさと納税)는 지방창생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했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지역의 다양한 과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재생법은 지자체가 작성하는 인증된 지역재생 계획을 토대로 지원 등을 하고, 지역이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관 연계에 의한 주택단지의 재생, 민간 사업자의 시설 정비에 관한 지방 채권 특례 창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지방거점강화세제의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内閣府, n.d.).

다. 지방정부의 정책 사례1: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의 이주 지원과 고향납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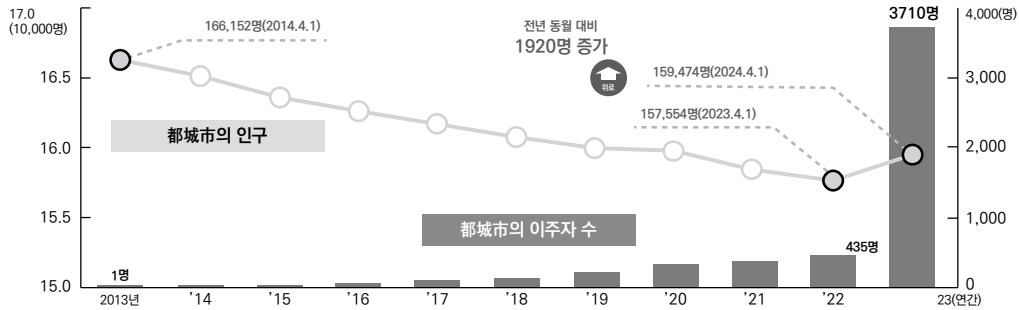
미야코노조시는 일본 규슈 지방 미야자키현에 위치한 시로, 2023년 기준 인구는 약 15만 명, 면적은 약 653.36km²이다. 미야자키현 내에서는 인구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온난한 기후, 역사적 유산, 풍부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데, 특히 다카치호 협곡이 유명하다. 농업이 주요 산업이며,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都城市, n.d.).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최근 일본의 지역 도시들은 지방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주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다. 미야코노조시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이주를 촉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미야코노조시로 이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엔의 이주 정착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 규모는 이주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가족 단위 이주자에게는 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한다. 미야코노조시는 현지 기업과의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주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최대 200만 엔의 창업 지원

금을 제공하며, 창업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빈집을 활용한 주택 임대 및 구매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한 빈집을 이주자들에게 제공한다. 최대 50만 엔의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주 희망자들이 도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단기 거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 희망자들이 실제 생활 환경을 경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미야코노조시의 이주 지원은 우리나라의 전입 지원금과 비슷한 정책이지만,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이주민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일자리 연계, 사회적 네트워크 등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한 정주 여건의 양적·질적 개선에 두루 집중하고 있다.

미야코노조시의 인구는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15만 9474명으로 전년도인 15만 7554명에서 1920명 증가하였다. 2011년 이후 13년 만의 인구 증가인데, 여기에는 이주자의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3년도 미야코노조시의 이주민은 3710명(1663세대)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8.5배 증가하였다(井上理, 2024. 8. 9.). 미야코노조시는 2023년부터 독자적인 이주 지원 제도를 시행하며, 이주 전의 거주 지역 요건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500만 엔으로 대폭 늘렸다(井上理, 2024. 8. 9.). 또한 미야코노조시는 이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 시청 종합정책부에 ‘인구 감소대책과’를 신설하고 그 안에 ‘이주·정주추진실’을 설치하여 기존의 ‘이주·정주지원센터’를 이전시켰다. 시는 10년 후 인구 증가 목표치로 연간

[그림 9] 일본 미야코노조시의 인구와 이주자 수(2013~2023년)



출처: “移住者「3710人」の衝撃 給付金だけじゃない人口増のワケ”, 井上理, 2024. 8. 9, 都城市 総合政策部 デジタル統括課 Think都城.
<https://think-miyakononojo.jp/article/9891/>

600명의 이주민 증가를 설정하였으나, 4개월 만에 전년도 실적을 넘어 한 해 동안 목표치의 2배 이상을 달성하였다(井上理, 2024. 8. 9).

미야코노조시의 2023년도 유입 인구 내역을 보면 3710명 가운데 18세 이상이 64%, 아동이 36%이다. 세대수로는 1663세대이고 세대주의 연령층이 30대 이하 62.5%, 40대 이하 83.1%로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세대가 많다(井上理, 2024. 8. 9.). 여기에는 미야코노조시가 2023년부터 실시하는 ‘보육료 전액 무료’, ‘중학생까지 의료비 전액 무료’, ‘임산부 건강검진 비용 전액 무료’ 등 교육, 의료 지원 정책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井上理, 2024. 6. 28.).

교육 지원 정책⁸⁾으로 미야코노조시의 무상 보육

은 정부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0~2세의 보육료를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제한과 아동의 연령, 인원수에 관계없이 시의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가 시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비인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厚生労働省, 2018).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해서도 월 최대 4만 2000엔까지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녀가 2명인 세대의 경우 연간 약 70만 엔에 달하는 보육료 부담이 해소된다(都城市, n.d.).

의료 지원 정책으로는 아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한다. 미야코노조시의 아동 의료비 지원은 일본의 다른 어

8) 3~5세의 경우 모든 가정에 인가 시설의 기본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인가 시설에 일정 수준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0~2세의 경우 주민세 면세 가구를 대상으로 인가 및 비인가 시설의 이용료를 일정 수준 지원하고 있다(井上理, 2024. 6. 28.).

[표 3] 일본 미야코노조시의 고향납부세 전국 순위와 기부 금액 추이(2008~2022년)

연도	2008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순위	325	9	1	1	3	6	2	1	2	1
기부금액	323만 엔	5억 엔	42억 엔	73억 엔	75억 엔	96억 엔	106억 엔	146억 엔	146억 엔	196억 엔

출처: “令和4年度・5年度「こどもに係る医療費の援助についての調査」”, こども家庭庁, n.d., <https://www.cfa.go.jp/policies/boshihoken/kodomoiryouhityousa-r4r5>

면 지역보다 두텁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 의료비 지원은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데, 지원 내용이나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며, 진료비, 입원비, 처방약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의 범위나 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미야코노조시에서는 2023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초등학교생부터 중학생에 대해 통원치료비 200엔(월 1회, 의료기관 1곳)의 자기 부담금을 없애고 중학생까지 모든 아동들에게 입원, 통원, 조제약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무상으로 전환했다(こども家庭庁, n.d.).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료 지원 정책도 전국적으로 상위 수준에 해당하는데, 임신부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출산 지원 시설은 총 5곳 설치되어 있다.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미야코노조 의료센터’가 2차 의료기관으로서 긴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야코노조시군의사회병원’과 ‘후지모토(藤元)종합

병원’이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都城市, n.d.).

미야코노조시의 고향납부세제도는 현재 참여 지자체 수가 약 1700개를 넘을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 2014년에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급성장했으며, 제도를 재정비해 대외 홍보 전략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부에 대한 답례품은 대부분 지자체의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는데, 미야코노조시의 주력 상품은 육류와 소주이다. 미야코노조시의 고향납부세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기부 금액 상위 10위권에 들며, 전국 1위를 여러 번 달성하기도 하였다. 미야코노조시는 고향납부세의 성과를 인구감소 정책에 반영하였다. 그 일환으로 시의 독자적인 재정을 활용해 이주 정착 지원금을 창설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와 미야코노조시의 이주 정착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라. 지방정부의 정책 사례: 돗토리현의 지역 기업과 도시 구직자 연계

돗토리현은 일본 주고쿠 지방에 위치한 현으로,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55만 명, 총면적은 3507.19km²이다.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 유산이 많고, 닛토리 사구와 미사사 온천으로 유명하다. 농업과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고, 최근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鳥取県, n.d.).

닛토리현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업(副業) 겸업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지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닛토리현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본업 외의 부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とっとり副業兼業プロジェクト, n.d.).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부업 알선 및 매칭, 창업 지원, 기술 교육 및 컨설팅이다. 부업 알선 및 매칭은 현지 기업과 개인 간의 부업 매칭 플랫폼인 ‘닛토리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 거점(とっとりプロフェッショナル人材戦略拠点)’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지원은 부업을 통해 현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특히 관광업이나 농업 분야에서 작은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 교육 및 컨설팅은 새로운 기술이나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부업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とっとり副業兼業プロジェクト, n.d.).

‘주 1회 부사장’ 프로젝트는 닛토리현의 독자적인 유치 플랫폼으로, 전략적 경영을 원하는 기업가와 외부 인재를 연결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닛토리현은 지역형 공공 직업소개소인 ‘닛토리현립 공공 직업소개소’를 현 전역에 설치하고, 현과 정부(内閣府)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닛토리 프로페셔널 인재전략 거점’을 통합하여 무료 직업 소개 기능과 인재 영입 기능을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비즈니스 인재 유치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신상품 개발,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 현의 기업들이 성장형 기업 경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시 지역의 인재를 이주 취업과 부업 겸업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 유치하고 있다(とっとり副業兼業プロジェクト, n.d.). 이 프로젝트는 현 내에 어떤 기업이 있고, 경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잠재적 이주 취직 후보군 또는 부업과 겸업의 선택지로서 자신들의 전문성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부업을 허가한 도시 지역의 대기업 인사 담당 직원과 연계해 사내 부업 세미나를 기획·운영하여 체험 투어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컨드 커리어 지원 제도⁹⁾와 부업 겸업 제도가 있는 도시 지역 대

9) 일본은 인구고령화시대 고령자의 정년 후 경제활동 지속 참여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컨드 커리어 지원을 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도의 추진, 고령자 인재뱅크 운영, 대기업 중심의 세컨드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 등이 이 정책에 해당된다(LIFE SHIFT LAB ジャーナル, n.d.).

기업과 연계하여 사내 연수, 사례 연구, 희망하는 이주 취업과 부업 겸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매칭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とっとり副業兼業プロジェクト, n.d.). 이 외에도 현립 직업소개소에 배치한 경험 많은 전략 매니저가 도시 지역의 대기업 인재를 활용하도록 현 내의 기업들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 경영 상담 등을 하고 있다(とっとりプロフェッショナル人材戦略拠点, n.d.). 이처럼 돗토리현의 기업·구직자 연계는 우리나라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유사하지만,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연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무 형태와 지원 방식을 통해 도시 인재가 지역과 관계를 맺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4 나가며

이 연구에서는 일본 인구감소 지역의 이주 지원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인구감소 대응은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 일본처럼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입 초기인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미야코노조시 사례와 같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인구감소 지역의 정책 지속성을 높이는 데 일정 수준의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다양한 제도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이른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일부 정책 영역에는 그러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일본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이와는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를 확장하고, 민간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활용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 법 개정 내용에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다. 지방창생전략과 지역재생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인구감소 대응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증가나 일자리 창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주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인구문제를 겪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단편적인 접근에 머물러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일본 정책 사례의 한국 적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특정 지역에 애정을 갖고 해당 지역에 기

부하는 제도'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답례품을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은 지역 간 모금 실적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2년 차를 맞아 기부금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의 본래 목적은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주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감소 지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부금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기부자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기여가 실제로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방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에서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민과 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향납부세 답례품 선정과 홍보 운영 등에서 민과 협력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이를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돗토리현의 경우 기업의 세컨드 커리어 제도 등과 연계하고 있었다.

셋째, 지자체 주도의 통합적인 이주 지원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정책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각 지역의 여건과 목표에 기반한 전

략을 수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창생전략하에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지방창생이주지원사업을 통해 이주자에게 정착금, 취업·창업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분석한 미야코노조시는 이러한 이주 지원 사업과 함께 교육과 의료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었다. 〇

참고문헌

- 김정숙, 한승혜. (2023).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가?: 중앙의 인구지원정책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37(3).
- 김현호, 이제연, 김도형. (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24. 3. 28.).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OTg3NSUyRmFydGNsVml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dTdHlIM0QIMjZiYnNpGVuV3JkU2VxJTNEJTI2cGFzc3dvcmlIM0QIMjZzcmNoQ29sdW1uJTNEc2oIMjZwYWdlJTNEmsUyNnJnc0JnbmRIU3RyJTNEJTI2cm93JTNEmtAIMjZpc1ZpZXdNaW5JTNEZmFsc2UIMjZzcmNoV3JkU2VxJTNEJUVDJTg2JThDJUVCJUE5JUI4JTl2>
- 농림축산식품부. (2024. 7. 2.). **농식품부, 농촌빈집 정**

- 비·이용 활성화 병행 추진한다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MDcxOSUyRmFydGNsVml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IM0QI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tdHIIM0QI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IM0RzaiUyNnJvdUzRDEwJTl2aXNWaWV3TWluZSUzRGZhbHNIJTl2cGFnZSUzRDEIMjZzc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
- 박성현, 최지호, 강현철. (2024). 섬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방안 연구. **GRI연구논총**, 26(1), 121-144.
- 신윤정. (2020). 국내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장기 추이 분석. **보건사회연구**, 40(3), 534-562.
- 우하린, 김정해, 송방현. (2024).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해외 사례: 일본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우해봉, 이상림, 장인수, 강성호, 김근태, 김안국, 김정호, 독고순, 박시내, 유상현, 유희원, 윤영모, 이용하, 전병목, 최차욱, 황준성, 임지영, 최슬기, 이병호, ... 장아름. (2021).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0866호(2025. 4. 1.).
- 임태경. (2024). 인구감소지역내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정지출 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8(2), 87-109.
- 장인수, 김은정, 이지혜, 황남희, 김은지, 최인선. (2024). **2024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수, 임준경. (2023). **2023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혜원. (2024. 1. 10.). 합계출산율 0.7명 사회 한국은 정말 끝났는가.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90>.
- 정부24. (n.d.). **전입지원금**.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A0%84%EC%9E%85%EC%A7%80%EC%9B%90%EA%B8%88&collectionCd=rcv&realQuery=&textAnalyQuery=&newsTotalCnt=37&gongmoTotalCnt=0&nuriTotalCnt=0&piPnTotalCnt=807&piRrTotalCnt=55&piPuTotalCnt=7&piPdTotalCnt=15&recommend_keyword_count=5
- 통계청. (2024a). **국내인구이동통계**(전출지/전입지(시도)/전입사유별 이동자수) [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B22&conn_path=l3에서 2024. 10. 29. 인출.
- 통계청. (2024b). **국내인구이동통계**(인구이동률(월, 분기, 년)) [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6_A01&conn_path=l2에서 2024. 10. 29. 인출.
- 통계청. (2024. 1. 30.).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400&bid=205&act=view&list_no=429253
- 통계청. (2024. 2. 28.).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29586

- 통계청. (2024. 3. 26.).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500&bid=10820&act=view&list_no=430089
- 통계청. (2025. 2. 26.).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300&bid=204&act=view&list_no=435209
- 행정안전부. (2021. 10. 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044640hZWR2q&fileSn=1
- 행정안전부. (2023. 6. 2.).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 본격 추진**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lId=100687
- 행정안전부. (2023.12.18.).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lId=105803
- 행정안전부. (2024. 2. 1.).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lId=106910
- 행정안전부. (2024. 5. 10.).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 사업 선정**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lId=109142
- 행정안전부. (2024. 7. 9.). **‘고향올래(GO郷All來)’ 사업을 통해 살아 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lId=110714
- 행정안전부. (2024. 10. 24.). **2년차 고향사랑기부, 올해도 순항 중**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lId=113252
- 행정안전부. (n.d.).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host/job/screen.do>
- 황남희, 김은지, 이성환, 라민경. (2024).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井上理. (2024. 6. 28.). 「保育料完全無料化」の舞台裏 本気の子育て支援、隙のない多面的政策. <https://think-miyakonojo.jp/article/9673/>
- 井上理. (2024. 8. 9.). 移住者「3710人」の衝撃: 給付金だけじゃない人口増のワケ. Think都城. <https://think-miyakonojo.jp/article/9891/>
- 厚生労働省. (2015). **平成27年版厚生労働白書**. <https://www.mhlw.go.jp/wp/hakusyo/kousei/15/dl/1-02.pdf>
- 厚生労働省. (2018). **幼児教育の無償に関する協議の場 幹事会 (第1回)**. https://www.mhlw.go.jp/stf/shingi2/0000066851_00006.html?utm_source=chatgpt.com
- こども家庭庁. (n.d.). **令和4年度・5年度「こどもに係る医療費の援助についての調査」**. https://www.mhlw.go.jp/stf/shingi2/0000066851_00006.html?utm_source=chatgpt.com

- cfa.go.jp/policies/boshihoken/kodomoiryo
uhityousa-r4r5
- こども家庭庁. (2023). 「**こども未来戦略**」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の実現に向けて**. https://www.cas.go.jp/jp/seisaku/kodomo_mirai/pdf/kakugikettei_20231222.pdf
- 鳥取県. (n.d.). **創業支援資金**. <https://www.pref.tottori.lg.jp/244761.htm>
- とっとりプロフェッショナル人材戦略拠点. (n.d.). 活動実績. <https://tori-pro.jp/activity>
- とっとり副業兼業プロジェクト. (n.d.). 週1副社長プロジェクト 副業兼業 サミット. <https://www.fukugyo-kengyo.tottori.jp/>
- 内閣府. (2022). **地方創生推進交付金制度要綱**. https://www.chisou.go.jp/tiiki/tiikisaisei/pdf/suisin_seido_youkou.pdf
- 内閣府. (2024). **令和6年版高齢社会白書(全体版)(PDF版)**.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24/zenbun/06pdf_index.html
- 内閣府. (n.d.). **第3章 人口・経済・地域社会をめぐる現状と課題**.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special/future/sentaku/s3_1_3.html
- 都城市. (n.d.). **産業・事業者, 健康・福祉・医療, 子育て・教育**. <https://www.city.miyakonojo.miyazaki.jp/>
- LIFE SHIFT LAB ジャーナル. (n.d.). **セカンドキャリア支援を受ける方法 | 支援企業の事例からおすすめるサービスまで網羅**. <https://lp.lifeshiftlab.jp/journal/articles/1352>
- 日本総研. (2013). “多死社会 一人ひとりが「死に方」を考え、それを実現する仕組みが必要,” ニュースレ, ター 2013年10月号. <https://www.jri.co.jp/page.jsp?id=25862>
- 総務省. (2024a). **人口推計 2023年(令和5年) 10月 1日現在**. <https://www.stat.go.jp/data/jinsui/2023np/pdf/2023np.pdf>
- 総務省. (2024b). **統計からみた我が国の高齢者**. <https://www.stat.go.jp/data/topics/pdf/topics142.pdf>
- 厚生労働省. (2022). **今後の高齢化の進展-2025年の超高齢社会像-**. <https://www.mhlw.go.jp/shingi/2006/09/dl/s0927-8e.pdf>

Japan's Policy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Relocation Support, Hometown Tax, and Policy Lessons for Korea

Hwang, Namhui

Kim, Eunj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 examine some examples of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decline in Japan, where the demographic trend began earlier than in Korea, and consider policy options relevant to the Korean context. Specifically, our discussion covers the current state of population decline in Japan and corresponding responses that emphasize childcare support and 'regional revitalization', as well as such locally driven efforts as the relocation support program and 'hometown tax' scheme implemented in Miyakonojo City (Miyazaki Prefecture) and Tottori Prefecture's initiative that links local businesses with urban job seekers. Japan's diverse policy responses offer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 a country where, as in Japan,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are a growing national concern. Japan's experiences with related legislative frameworks, localized practical solutions, and interventions aimed at engaging the business sector provide valuable insights that merit attention from policymakers in Korea. From our observations of the Japanese cases, we derive several takeaways for Korea: improve and systematically manage the Hometown Love Donation Program on a continued basis so that it can achieve its intended policy outcomes; enhance policy efficacy by promoting public-private collaboration; adopt locally led, integrated strategies; and strengthen local policy capacity.